

기획: 사회 과학의 역사 (History of the Social Sciences)

지성사, 관념사에서 ‘사회 과학의 역사’ 로

김상현 (객원 편집인)^{†1}

과학과 기술은 현대 사회에서 차지하는 핵심적 역할과 위치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한국의 역사학과 사회 과학계 내에서 주요 연구 주제의 하나로 인식되지 못해왔다. 과학사와 기술사, 그리고 의학사, 과학(기술) 사회학, 과학(기술) 인류학 등 인접 분야의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또한 여타의 역사학과 사회 과학 연구 특히 구한말과 식민지 시기를 다루는 연구의 범위가 근대적 지식의 전이, 확산과 제도화 등 과학, 기술과 직 · 간접적으로 연결된 주제들로 확장되면서 그러한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기는 하다.²⁾ 그러나 한국의 인문학 · 사회 과학계에 여전히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통념은 과학과 기술을 비사회적이고 비정치적인, 독립적 영역으로 선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을 역사적, 사회 과학적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추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는 비단 과학과 기술에 관한 예외주의적 관점 뿐만이 아니라 집합적(collective) 산물로서의 지식의 사회적 배태성(social embeddedness)과 맥락 의존성(context-dependence)에 대한 인식 결여에도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학, 기술과는 달리 사회 · 정치적 맥락과의 연계가 보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사회 과학 지식과 실천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역사적, 사회 과학적 연구가 미진한 실정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³⁾

1 이 글은 2008년 정부(교육 과학 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 연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1-A00005).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HK교수, 과학사/과학사회학, shkim67@hanyang.ac.kr

2) 정준영, “기획 서문: 식민지와 과학, 그 형용 모순의 관계를 넘어서기”, □ 한국과학사학회지 □ 37:1 (2015), 199-207 및 기타 수록 논문; 황종연 엮음, □ 문학과 과학 1: 자연, 문명, 전쟁 □ (소명출판, 2013); 황종연 엮음, □ 문학과 과학 2: 인종, 마술, 국가 □ (소명출판, 2014); 황종연 엮음, □ 문학과 과학 3: 영혼, 생명, 통치 □ (소명출판, 2015).

3) 주목할 만한 작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하영선 외, □ 근대 한국의 사회 과학 개념 형성사 □ (창비, 2009); 하영선 외, □ 근대 한국의 사회 과학 개념 형성사 2 □ (창비, 2012); 진덕규 엮음, □ 한국 사회의 근대적 전환과 서구 사회 과학의 수용 □ (선인문화사, 2013); 김현주, □ 사회의 발견: 식민지기 사회에 대한 이론과 상상 그리고 실천, 1910-1925 □ (소명출판, 2013).

물론 적지 않은 기존의 연구들이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관한 근대적 지식 주장을 다뤄왔지만 사상사(history of thought), 관념사(history of ideas) 및 지성사(intellectual history)의 전통적 접근에서 벗어나지는 못해 왔다. 이제까지의 국내 연구들은 대개 다음의 세 유형 중 하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⁴⁾ 첫째, 사상가나 지식인의 대표적 텍스트에 드러난 사상과 관념의 의미를 다분히 고정된 것으로 또는 목적론적으로 파악하고, 현재적 시점에서 후고학적으로 고찰하는 휘그적(Whiggish) 접근, 둘째, 사상과 관념의 의미를 자명한 것으로 전제하지는 않되 주로 그 기원을 지식 생산 외부의 사회적 원천, 즉 사상가와 지식인의 계급적, 사회적 지위나 당대의 거시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적 조건으로부터 읽어내는 데 초점을 두는 접근, 셋째, 사회 과학의 각 분야에서도 주요 개념, 이론과 방법의 역사적 변천을 추적하는 분야사(disciplinary history) 작업이 간간히 이루어져 왔으나 첫 번째 접근과 마찬가지로 휘그적 편향을 강하게 띠어 왔다. 이 접근들은 상이한 학문적 입장에 기반하고 있지만, 사회 과학 지식과 실천이 실제 집합적으로 생산되고, 평가되며, 수행되는 과정을 문제화하기보다는 블랙 박스(black box)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최근 들어 국내 학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코젤렉(R. Koselleck)의 ‘개념사(begriffsgeschichte)’ 접근과 스키너(Q. Skinner), 포콕(J. G. A. Pocock) 등의 ‘맥락주의(contextualist)’ 정치 사상사 접근 역시 각기 다른 각도에서 사상과 관념이 맥락 의존적임을 강조하고 있기는 해도 그 같은 블랙 박스의 해부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⁵⁾

북미·유럽에서 사회 과학 지식과 실천 자체를 역사화, 상대화하여 분석하는 새로운 사회 과학의 역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쿤(T. S. Kuhn) 이후의 과학사와 과학 사회학 연구들에 힘입은 바 크다.⁶⁾ 주지하다시피 이 연구들은 과학 지식과 실천이 자연적 실재와의 일치, 논리적 정합성과 비인격적(impersonal) 방법에 의해 단순히 결정되지 않으며 해당 학문 공동체가 공유하는 목표, 가치, 이해 관계, 지적 전통, 신뢰와 신망의 관계 등 사회적 요인들을 경유하여 형성됨을 설득력

4) 사상사, 관념사와 지성사의 차이에 대해서는 D. M. McMahon and S. Moyn, eds., *Rethinking Modern European Intellectual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박근갑 외, □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개정증보판) □ (소화, 2015); 켄틴 스키너, 황정아·김용수 옮김, □ 역사를 읽는 방법: 텍스트를 어떻게 읽고 해석할 것인가 □ (돌베개, 2012) 등 참고.

6) Steven Shapin, “History of Science and Its Sociological Reconstructions,” *History of Science* 20:3 (1982), 167-211; Steven Shapin, “Here and Everywhere: Sociology of Scientific Knowledge,” *Annual Review of Sociology* 21 (1995), 289-321; Jan Golinski, *Making Natural Knowledge: Constructivism and the History of 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있게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종종 오해되어 왔듯이 과학이 비합리적 요인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가능케 하는 합리성이 곧 사회적으로 배태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또한 그 구체적 양상은 상황 의존적(contingent)일지라도 과학 내부의 사회적 요인들과 외부의 거시 사회적 맥락이 상호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쿤 이전의 과학사와 과학 사회학이 채택하고 있던 내적(internal)/외적(external) 접근의 이분법에 도전하였다. 이처럼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온 과학이 그것이 생산된 국지적인(local)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다는 인식 그리고 내적/외적 구분의 기각은 과학사 분야와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사회 과학의 역사 연구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휘그적 해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회 과학 지식이 탄생하게 된 외적 조건이나 그의 사회적 전파, 소비와 전유에 집중되었던 역사 분석은 점차 지식이 생산되고, 평가되며, 적용되는 국지적이자 집합적인 과정으로 확대되어 갔다.

7)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과학사 분야는, 적어도 초기에는, 사회 과학을 연구 대상으로 수용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자연’, ‘사회’, ‘과학’ 과 같은 범주의 경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드러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분야의 하나인 과학사이지만, 물리 과학을 위시한 경성(hard) 과학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지식의 전통적 위계로부터 자유롭지만은 않았던 것이다.⁸⁾ 사회 과학은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이 무엇인가에 관한 높은 수준의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고 세계에 개입하여 새로운 현상을 창조하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성(scientificity)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부차적인 영역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낮은 수준의 합의가 반드시 지식 주장의 신뢰성이 임의로 판단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 과학의 각 분과 혹은 학파 내에서도 지식의 생산, 평가 및 적용을 규제하는 제도화된 방법과 절차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과학사 분야가 이러한 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식적(epistemic) 권위를 분석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예견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이후 각 국의 공공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사회 과학 전문성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온 것에 대한 재인식은 이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과학적, 공학적 기법이 사회

7) 북미 * 유럽 사회과학사 연구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는 T. M. Porter and D. Ross,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Science, Vol. 7: The Modern Social Scienc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R. Backhouse and P. Fontaine, eds., *The History of the Social Sciences since 194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등 참고.

8) T. M. Porter and D. Ross, “Introduction: Writing the History of Social Science,” in Porter and Ross, eds., *The Modern Social Sciences*, 1-10.

과학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차용되었다는 점은, 사회 과학 지식의 개입 효과에 관한 사회적 논란과 함께, 과학사 연구자들이 사회 과학에 주목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⁹⁾

사회 과학 지식과 실천에 관한 맥락적 역사 연구가 활성화되는 데는 푸코(M. Foucault)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 그의 작업은 무엇보다 사회 과학의 성장과 제도화가 근대 국가의 형성과 확장에 맞물려 전개되어온 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고도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전통적인 역사 연구들은 이 과정을 후원자-의뢰인 관계로 개념화하거나 사회 과학을 국가에 의해 동원되는 자원 혹은 지배적인 사회·정치적 질서가 일방적으로 반영되는 객체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반면, 푸코는 인간과 사회에 관해 진리로 여겨지는 지식의 생산과 보급을 관장하는 인식적 구조, 즉 ‘진리 체제(regime of truth)’의 수립이 새로운 유형의 주체와 사회적 현상을 창출하는 권력 효과를 유발하는 동시에 그렇게 구축된 권력 관계에 의해 다시 지탱된다고 역설했다.¹⁰⁾ 이어 그는 그러한 진리 체제가 세계를 사유할 수 있고 가독 가능한(legible), 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는 ‘앎의 장치(apparatus of knowledge)’를 제공함으로써 근대 국가의 ‘통치 합리성(혹은 통치성, governmentality)’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동한다고 주장했다.¹¹⁾ 이 같은 입장은 지식의 사회적 배태성을 강조하는 쿤 이후 과학사와 과학 사회학의 인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지만, 지식과 권력의 성격이나 이들이 연결되는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¹²⁾ 그럼에도 푸코의 관점은 사회 과학의 역사 연구가 지식과 관련 실천을 문제화하도록 독려하고, 나아가 지식과 근대 국가의 다층적·다면적 상호 관계에 관한 보다 포괄적 논의로 이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 한국과학사학회지□의 이번 기획은 이상에서 간단히 살펴본 쿤 이후 과학사와 과학 사회학의 연구 성과 및 푸코의 통찰을 수용하는 맥락적인 사회 과학의 역사 연구가 국내 학계에서도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9) 예를 들어, H. Cravens, “History of the Social Sciences,” *Osiris* 1 (1985), 183-207 참조.

10) M. Foucault,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New York: Vintage Books, 1980), 109-133.

11) G. Burchell, C. Gordon, and P. Miller, eds.,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12) 예를 들어, 지식과 사회 질서의 상호 관계에 관한 Steven Shapin, Simon Schaffer, Sheila Jasanoff 등의 접근과 비교해보라. Steven Shapin and Simon Schaffer, *Leviathan and the Air Pump: Hobbes, Boyle, and the Experimental Lif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Sheila Jasanoff ed., *States of Knowledge: The Co-Production of Science and the Social Order* (London: Routledge, 2004).

역사학, 정치학, 문학·문화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사회 과학의 역사 특히 한국에서의 사회 과학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¹³⁾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여전히 개별 사상가, 지식인이나 특정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물론 한국에서 근대적 사회 과학의 제도화가 상당히 늦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 과학 지식과 실천이 생산, 평가, 활용되는 집합적 과정을 역사화, 상대화하는 접근이 아직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에 문제를 느낀 몇몇 연구자들은 2014년 11월 제 57회 전국 역사학대회 과학사 분과에서 □ 사회 과학, 근대 국가와 역사 서술□이라는 제목의 패널을 구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회 과학과 근대 국가의 상호 관계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특집 기획의 아이디어가 처음 제시되었다. 한양대학교 비교 역사 문화 연구소 HK 트랜스 내셔널 인문학 사업단의 후원으로 조직된 이 패널에서는 19세기 프랑스의 경제학(오경환), 20세기 초 영국의 인류학(백영경), 1960년대 주한 통계 고문단의 조사 활동(조은주)과 1960년대 한국에서의 근대화 이론 수용(김상현)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번 기획은 이 발표들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사정상 일부 주제들이 포함되지 못한 대신 식민지 조선의 농가 경제 조사(김인수)를 주제로 한 새로운 연구가 추가되었다.

첫 번째 논문에서 오경환은 푸코주의 담론사 방법론을 채택하여 19세기 프랑스 경제학의 역사를 지식-실천(knowledge-practices)의 역사로 해체한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은 대중들에게 제한적이거나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였고, 이와 함께 경제적 불평등을 ‘사회적 문제’로서 제기했다. 이에 대한 자유주의 경제학의 대응은 가난을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하는 도덕화 전략이었다. 하지만 혁명 이후 7월 왕정 복고에 이르는 시기 자유주의 경제학은 아직 취약한 근대 국가의 통치성을 구성하는 지배적 지식 레짐으로서의 위치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었다. 7월 왕정이 확립됨에 따라 부와 가난을 포함한 사회적 문제들에 과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가했지만, “이성의 주권”이라는 표어 아래 이루어진 통치성의 구축은 오히려 이 문제들을 자유주의 경제학으로 수렴하기보다 일련의 다른 사회 과학적 접근들로 분화되도록 유도했기 때문이다. 제2제정 시기에 이르러 자유주의 경제학은 맬서스 주의의 재발견을 통해 자유주의적 전제를 유지하면서도 가난의 문제에 관한 새로운 과학적 이해를 제시함으로써 다시금 지식 레짐 안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제3 공화국 시기 불거진 ‘인구 감소’ 문제는 프랑스 근대 국가의 성격을 ‘국민-사회 국가’로 변모시킴으로써 순정한 의미의 자유주의 경제학이 통치성의 구성 요소로서 작동하는 것을 심대하게 제약했다. 이 논문이

13) 각주 2의 문헌들 참고.

기술하고 있는, 통치성에 의한 자유주의 경제학의 복잡한 매개 ‘전복’ 전유는 통치성의 현실태로서의 ‘국가’와 사회 과학 지식 사이의 공생산(co-production) 관계를 보여준다.

두 번째 논문에서 김인수는 식민지 조선에서 수행된 농가 경제 조사의 이론적 틀, 분류와 조사 방법에 관한 검토를 통해 조사의 정치적 의미를 분석한다. 당시 농가 경제 조사는 러시아의 ‘소농 경제론’에 기반한 일본의 조사 기법을 수용하여 진행되었는데, 특히 1930년대 초에 행해졌던 조선 농회의 조사는 식민지 농업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 조사는 조선의 농촌에 상당한 규모의 가내 잉여 노동력이 존재함을 확인해주었고, 임금 노동을 가족 노동으로 대체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농가 갱생 계획과 자력 갱생 운동의 ‘객관적’ 근거로 활용되었다. 그런데 조사 원자료의 해석은 잉여 노동력을 산출하는 특정한 방식에 입각한 것이었고, 이는 다시 소재 노동력과 소요 노동력을 어떻게 산출하며 연령 및 성별 농업 노동력 환산율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의존하고 있었다. 물론 조사자들이 의도적으로 총독부 정책에 부합되도록 노동력 산출을 조작한 것인지, 의식적은 아니지만 식민주의 이데올로기가 노동력 산출 과정에 편향으로 개입된 것인지, 혹은 조사자들에 의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진 전문적 판단이 식민주의 권력 관계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던 것인지를 경험적으로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 배경이 어떠한가 조사에서 채택된 잉여 노동력 산출 방식은 근면과 내핍을 강조하는 정신 동원적 비전을 강화하고 식민지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농가에 전가하는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했다. 대안적 조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조선 농회의 농가 경제 조사는 식민지 사회의 정신 구조와 경제 생활을 규정하는 지식 권력으로 작동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은주의 논문은 1960년대 남한에서 공식 통계(official statistics)가 제도적으로 확립되는 과정을 주한 통계 고문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추적한다. 미국의 대외 원조처(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와 통계 자문 회사 서-베이스·리써취 회사(Surveys & Research Corporation)의 계약을 통해 설치된 주한 통계 고문단은 1958년에서 1963년까지 남한의 국가 통계 기구와 제도들에 관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들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여러 편의 보고서들을 생산했다. 통계법의 제정, 통계국 내 전문 표본 조사 기구와 통계 자료 처리소의 설립, 농림 통계 기구의 확대, 국제 조사 위원회의 통계위원회로의 개편, 대학 통계학과 신설, 통계 공무원 훈련 강화 등을 포함하여 1960년대 남한에서 전개된 통계 정책 및 관련 제도 변화는 대부분 주한 통계 고문단의

자문에 기초한 것이었다. 주한 통계 고문단의 활동은 한편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냉전 질서 속에서 제3세계를 인식 가능한(knowable) 공간으로 전환시키려는 서구 중심적 지식/권력 레짐에 남한이 편입되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동시에 탈식민 국가 형성 중에 이루어진 통계 지식 생산의 비약적인 확대는 사회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앎의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남한에서 강한 발전국가가 형성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통계법 제정 이후 경제 기획원 산하의 조사 통계국은 통계의 생산만이 아니라 국내의 모든 통계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체계화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된다. 즉, 강한 국가에 의해 통계 지식이 동원되었다기보다는 통계 지식이 강한 국가를 창출한 것이다.

이번 특집은 수록된 세 편의 논문 모두 경제학과 통계학 두 분야로 주제가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맥락적인 ‘사회 과학의 역사’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영향력 있는 사상가, 지식인과 대표적 사회 과학 개념에 초점을 두고 지식의 사회적 배태성에는 상대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기존의 사상사, 관념사 및 지성사 연구와 다른 종류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겠다. 때로 지나치게 추상화되고 일반화된 방식으로 논의되어 온 사회 과학과 근대 국가의 상호 관계를 각기 다른 역사적 시기와 공간을 다루는 경험 연구를 통해 살펴봤다는 점도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사회 과학이 과학사 분야의 주요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이는 한국에서 과학사 분야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지난 과반세기 동안 축적되어 온 과학사 분야의 (그리고 과학 사회학, 과학 인류학 등 인접 분야의) 연구 성과가 지식의 문제에 관심을 지닌 여타의 역사학과 사회 과학 연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아무쪼록 이번 기획이 앞으로 한국 과학사 학계에서 사회 과학의 역사 연구가 활발해지고, 경제학, 통계학 외에도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인구학, 경영학, 정책학 등 다양한 사회 과학 분과에 관한 연구들이 생산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